

I. 미 국

□ FY2011 : 2010.10 ~ 2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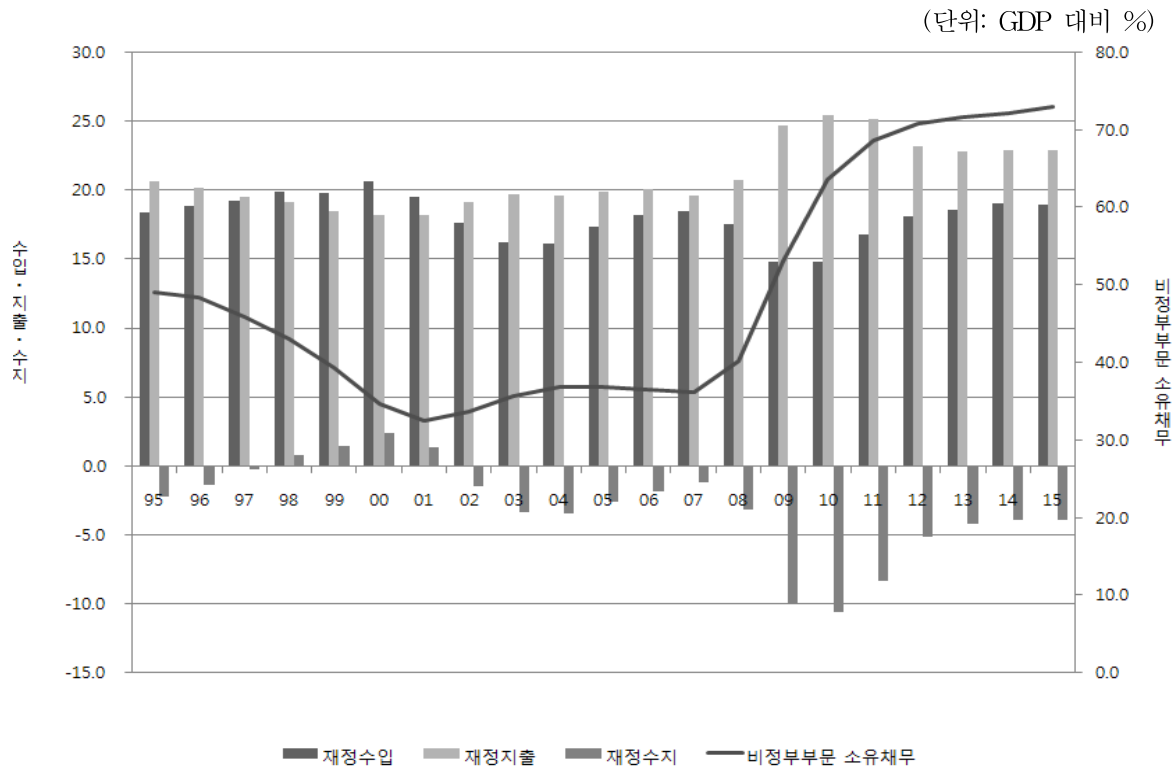
□ 출처 : Fiscal Year 201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0.2월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0 to 2020, CBO, 2010.1월

□ 환율(2009년 평균) : 1USD = 1276.4원

□ 경제규모 : 2008년 경상GDP 14조 3,694억달러(우리나라의 10.7배)

[그림 I -1] FY2011 예산안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주: 1. 재정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는 회계연도 기준, 비정부부문 소유채무는 연말기준

2.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채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 연방정부 공공채무(public debt)는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빌려오는 채무(누적개념)라는 의미에서 연방부채 판단시 유의미한 개념

3. 1995~2009년: 실적치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09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로 전환되고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호전됨에 따라 경기회복 추세 지속 전망
- (재정전망)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와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는 대폭 감소(FY2010 대비 18.6%) 전망

◇ 예산기조: 높은 수준의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경기부양책 등으로 악화된 재정상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

- ① 일자리 창출
- ② 경기부양정책 지속 추진
- ③ 재정건전화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2011 재정수입은 FY2010년 대비 18.6% 증가한 2조 5,670억달러 전망
- 총지출규모 3조 8,340억달러로 편성된 FY2011 예산안은 미래 대비 전략투자로서 교육 및 R&D 예산을 증액하고, 국방·대테러 등 국가안보 지출 확대

◇ 주요 재정정책

- 고용촉진·지원 및 경기회복 정책
 - '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ARRA)의 관련 정책 연장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제시
- 재정건전화
 - 재정위원회 설립,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재정사업 운영 개선 방안 등과 함께 PAYGO원칙 도입 및 신속재원폐지 등 예산제도 개혁을 제안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²⁾

□ '09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로 전환되고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호전됨에 따라 경기회복 추세 지속 전망

○ 주택 및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신뢰지수 및 기업의 경기체감 지수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

○ 산업생산지수 및 개인소득의 개선 역시 경기호전 전망을 뒷받침

* 산업생산지수('10.1월 발표, 2002=100): ('09.7월) 96.9 → ('09.8월) 98.3 → ('09.9월) 98.9 → ('09.10월) 99.1 → ('09.11월) 99.7 → ('09.12월) 100.3

* 실질개인소득('10.2월 발표, 전분기 대비 변화율): ('09:1Q) △3.2% → ('09:2Q) △0.9% → ('09:3Q) △0.3% → ('09:4Q) 0.3%

□ 다만, 경기회복의 기세가 미약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미국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을 이룰 전망

○ 실업률은 경기회복의 속도가 완만함에 따라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 높은 실업률과 민간소비 부진으로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

○ 국채수익률은 점차 상승하겠으나,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평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

2) 미국의 경제전망 부분에서 표시된 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나타내고, 그 이외의 부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국의 회계연도를 의미

<표 I -1> FY2011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¹⁾	- 2.5	2.7	3.8	4.3	4.2	4.0	3.6	3.2	2.8	2.6	2.5	2.5
CPI(CPI-U) ¹⁾	- 0.3	1.9	1.5	2.0	2.0	2.0	2.0	2.0	2.1	2.1	2.1	2.1
실업률 ²⁾	9.3	10.0	9.2	8.2	7.3	6.5	5.9	5.5	5.3	5.2	5.2	5.2
금리												
91일 만기 국채 수익률 ³⁾	0.2	0.4	1.6	3.0	4.0	4.1	4.1	4.1	4.1	4.1	4.1	4.1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3	3.9	4.5	5.0	5.2	5.3	5.3	5.3	5.3	5.3	5.3	5.3

주: 1) 전년 대비 %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나. 재정전망

□ (재정수입)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소득 및 기업이익 증대로 재정수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FY2010('09.10월~'10.9월)의 재정수입은 FY2009 대비 2.9% 늘어난 2조 1,651억달러(GDP의 14.8%)* 전망

* FY1950(재정수입이 GDP의 14.4%) 이래 최저 수준

○ FY2011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8.6% 증가한 2조 5,672억달러(GDP의 16.8%) 전망

○ 이후 FY2011~FY2015 기간 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9.1% 증가하고, FY2015~FY2020에는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지출)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 FY2010 재정지출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5.8% 증가한 3조 7,210억달러(GDP의 25.4%) 전망

- FY2011에도 재정지출은 전 회계연도와 유사한 수준인 GDP의 25.1% (3조 8,340억 달러, FY2010 대비 3% 증가) 전망
 - FY2011~FY2015 동안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FY2015~FY2020에는 연평균 5.4% 증가 전망
- (재정수지)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급격한 재정수입 감소와 지출 확대로 FY2010 재정수지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악화될 전망이나,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FY2010 재정적자는 1조 5,560억달러(GDP 대비 10.6%)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 FY2011 재정적자는 1조 2,670억달러(GDP 대비 8.3%)로 FY2010 대비 18.6% 감소 전망
- (국가채무)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
- FY2010의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9조 2,980억달러로 GDP 대비 63.6%, FY2011에는 10조 4,980억달러(GDP의 68.6%)에 이를 전망
 - 향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지급 규모의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
- * 순이자지출 전망(GDP 대비, %): (FY2010)1.3 → (FY2011)1.6 → (FY2012)2.1 → (FY2013)2.5 → (FY2014)2.8 → (FY2015)3.0

<참고 1>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 연방정부 공공채무(public debt)는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빌려오는 채무(누적개념)라는 의미에서 연방부채 판단시 유의미한 개념

<표 1-2> FY2011 예산안 재정전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2,165	2,567	2,926	3,188	3,455	3,634	3,887	4,094	4,299	4,507	4,710
지출	3,721	3,834	3,755	3,915	4,161	4,386	4,665	4,872	5,084	5,415	5,713
재정적자	1,556	1,267	828	727	706	752	778	778	785	908	1,003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9,298	10,498	11,472	12,326	13,139	13,988	14,833	15,686	16,535	17,502	18,573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4.8	16.8	18.1	18.6	19.0	18.9	19.3	19.4	19.5	19.5	19.6
지출	25.4	25.1	23.2	22.8	22.9	22.9	23.1	23.1	23.0	23.5	23.7
재정적자	10.6	8.3	5.1	4.2	3.9	3.9	3.9	3.7	3.6	3.9	4.2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63.6	68.6	70.8	71.7	72.2	72.9	73.6	74.2	74.9	75.9	77.2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참고 2> CBO 경제 및 재정전망('10.1월)

- (경제전망)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향후 수년간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을 전망
-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약화
 - 가계소비 역시 소득증가율 감소, 자산손실, 대출자격 악화 등으로 제약을 받을 전망이며, 투자지출도 높은 부동산 재고로 인해 둔화될 전망

<표 1-3> 경제전망

(단위: %)

	2010	2011	2012-2014 ¹⁾	2015-2020 ¹⁾
실질 GDP ²⁾	2.2	1.9	4.4	2.4
CPI-U ²⁾	2.4	1.3	1.2	1.9
실업률 ³⁾	10.1	9.5	6.5	5.0
금리 ³⁾				
91일 만기 국채수익률	0.2	0.7	2.9	4.6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3.6	3.9	4.5	5.5

주: 1) 연평균

2) 전년 대비, % 변화율

3) 연평균, %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0 to 2020, CBO, 2010.1월

□ (재정전망) 현 정책 유지시 FY2009 이후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FY2014 이후로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

○ FY2010 재정적자는 1조 3천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보다 650억달러 감소한 수치, FY2008 재정적자의 3배 수준

○ FY2011 재정수지는 경기회복, 조세조항 기한만료, 경기부양정책 관련 지출감소로 9,800억달러(GDP의 6.5%)의 재정적자 전망

<표 1-4> 재정전망¹⁾

(단위: GDP 대비 %)

	2009 ²⁾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정수입	14.8	14.9	17.8	18.8	19.3	19.7	19.7	19.8	19.9	20.0	20.1	20.2
재정지출	24.7	24.1	24.3	23.0	22.5	22.4	22.3	22.6	22.6	22.6	23.1	23.3
재정수지	-9.9	-9.2	-6.5	-4.1	-3.2	-2.7	-2.6	-2.7	-2.6	-2.6	-3.0	-3.0

주: 1) 현재의 정책 유지를 가정

2) 확정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0 to 2020, CBO, 2010.1월

2. 예산기조

※ 예산기조의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주요 재정정책 참조

■ FY2011 예산안은 높은 수준의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경기부양책 등으로 악화된 재정상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

- ① 일자리 창출
- ② 경기부양정책 지속 추진
- ③ 재정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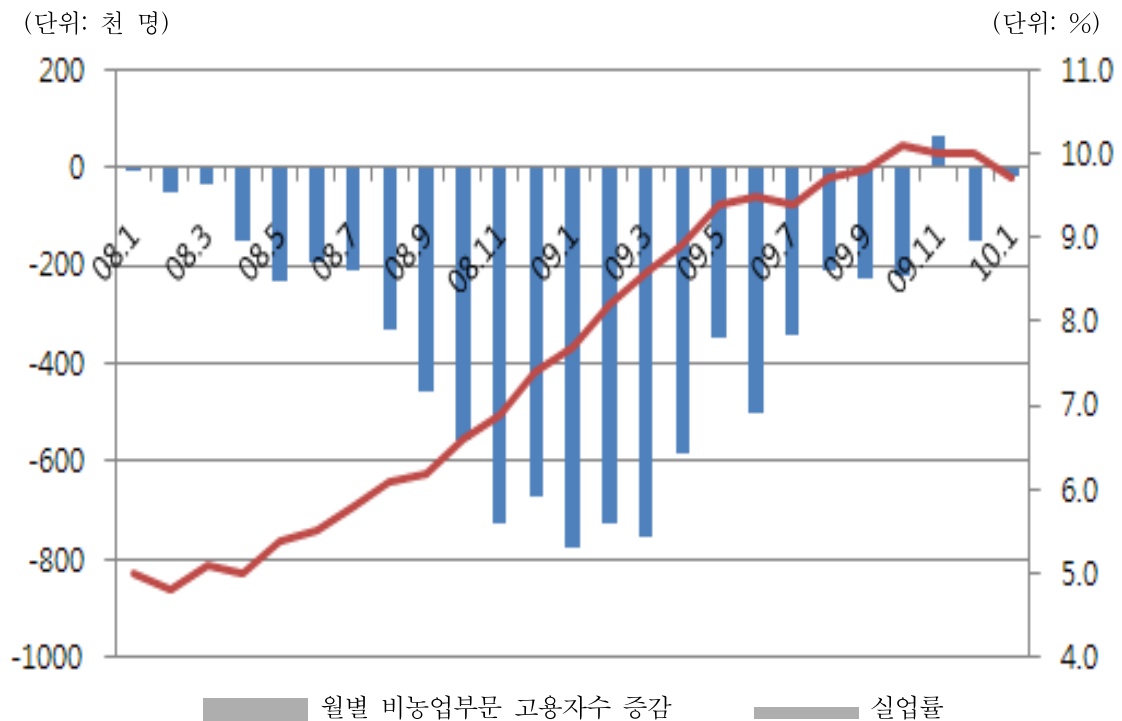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 '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ARRA)³⁾의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제시

- '09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이 (+)로 전환되고 일자리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
- 이에 따라, 경기부양법(ARRA)의 일부 관련 조항을 연장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 현재 의회에서 입법 진행중인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예산배정 및 추가적 실업 대책*을 마련

*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출 보증 프로그램 예산지원, 인프라기금(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and Finance Fund) 신설 등

3)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그림 1-2] 고용 및 실업률 추이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 (재정건전화) 경기부양책 등으로 악화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제시
-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정적자를 임기 내에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FY2010 예산안에 이어 재약속
 -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재정위원회 설립 및 3년간 비안보 재량 지출 동결, 의료보험·실업급여 등의 부당수취 방지, 세원의 투명한 조달 제고 등을 제안
 - 예산제도적 측면에서는 PAYGO원칙 도입과 행정부가 의회 승인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신속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를 제의

<참고 3> 신속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에 관하여 의회에 폐지요청을 하는 것으로 상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재원폐지 제안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의 수정 및 토론 제한 등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0 총재정수입은 FY2009보다 601억달러(2.9%) 증가한 2조 1,651억달러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소득 및 기업이익의 증가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세(payroll tax), 개인소득세, 법인세 증가 전망
 -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 System)의 이익금(기타 수입으로 분류) 증가 역시 FY2010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

- 지속적인 경기회복 가정하에 FY2011 재정수입은 FY2010년보다 4,021억달러(18.6%) 증가한 2조 5,672억달러 전망
 -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 책임금 부과, 부부합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독신 20만달러)의 고소득자에 대한 2001, 2003년 감세법 종료 등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 기대
 - FY2011 재정수입은 GDP 대비 16.8%로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2%p 증가할 전망

<표 1-5> 분야별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09 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개인소득세	915	936	1,121	1,326	1,468	1,604	1,733	1,856	1,980	2,102	2,223	2,338
법인세	138	157	297	366	393	445	411	449	463	473	486	502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사회보장 급여세	654	635	674	720	766	809	856	911	954	1,000	1,044	1,084
의료보험(Medicare) 급여세	191	180	192	208	223	237	251	267	280	293	307	318
실업보험	38	51	60	67	73	77	79	79	78	77	76	77
기타 퇴직연금	8	9	8	9	9	9	9	9	9	9	9	10
소비세	62	73	74	81	85	87	88	89	90	90	91	92
유산세 및 증여세	23	17	25	23	24	26	28	30	32	35	37	40
관세	22	24	27	32	35	37	39	42	44	47	49	52
연방준비제도 이익금	34	77	79	67	59	52	48	50	52	55	57	59
일자리 창출 대책	-	-12	-25	-8	-3	-2	-	-	-	-	-	-
의료보험 개혁	-	-	16	18	39	58	74	86	93	101	110	119
기타 수입(연방준비제도 이익금 제외)	18	18	17	17	17	18	18	18	18	19	19	19
총재정수입	2,105	2,165	2,567	2,926	3,188	3,455	3,634	3,887	4,094	4,299	4,507	4,710
GDP 대비 %	148	148	168	181	186	190	189	193	194	195	195	196

주: 1) 확정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나. 분야별 예산

□ (교육)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재량지출 예산을 FY2010 대비 6.2% 증액

○ 주/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교육개선사업(Race to the Top*)에 13.5억달러 배정

* 주요 내용: 학업성취도 기준 상향조정 지원, 교사 능력 및 우수교사의 공평한 배정 제고,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통계 사용, 학업성취가 낮은 학교의 성과제고

○ 작년 예산안에 이어 학자금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

- OMB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2011~2020) 433억달러 절감 효과 예상

○ Pell Grant 장학금 역시 작년에 이어 최대 수혜액을 CPI+1%로 연동 조정할 것을 제안

- 이에 따라, FY2011 Pell Grant 장학금 상한액은 160달러 인상된 5,710달러

- Pell Grant 장학금을 현행 재량지출과 법정지출의 혼합 운영 시스템에서 법정지출로 전환할 것을 제안

- 향후 10년간 Pell Grant 장학금 인상분 686억달러는 학자금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얻어지는 예산절감분으로 상쇄

□ (R&D 및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및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증액한 반면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Constellation program)은 중단

○ 핵심 기초연구를 관할하는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의 과학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예산 증액

- 국립과학재단 예산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74억달러, 에너지부 과학국에는 4.6% 증가한 51억달러,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는 7.0% 증가한 9억달러 배정

○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Constellation program) 중단

-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종료(cf. FY2010 예산권한 규모 35억달러)
- 국립보건원(NIH)의 FY2011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21억달러
 - 증액된 예산은 계놈, 생의학 연구 등에 지원될 것이며, 특히 암과 자폐증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

□ (국가안보) 국방 및 대테러 관련 예산 확대

- (국방예산) 일반군사 활동에 5,738억달러(전년 대비 3.5% 증가)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의 전략수행 등 해외 군사작전 비용으로 1,593억달러(전년 대비 2.3% 감소)를 의회에 요청
 - (일반군사 활동) 국방부가 5,489억달러, 핵무기 관련 활동으로 에너지부 178억달러, 기타 안보활동(FBI, 해안경비대 등)에 70억달러 배정
 - (해외 군사작전 비용)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사용될 해외 군사작전 비용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증원*을 감안하여 요청

<참고 4>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증원

- '09.12월 오바마 대통령은 올 상반기까지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하고 '11.7월 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발표
 - FY2010 추경으로 요청한 330억달러의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3만명 이상 증파하여 올 상반기까지 10만명으로 증원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
 - FY2011 예산안에서 요청한 해외전비 1,593억달러도 '11.7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10만명 수준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을 가정하여 편성

- (국토안보부) 항공보안에 대한 추가 재원 배정 등 국토안보부의 재량지출 예산권한은 전년 대비 10.5% 증가

<표 1-6> 국방예산(기능별 지출)

(단위: 예산권한, 십억달러)

	2010	2011	증감	비중(%)
재량지출:				
일반군사 활동(해외 군사작전 비용 제외)				
국방부	530.8	548.9	18.2	3.4
원자력 활동	16.6	17.8	1.2	7.2
기타 국방관련 활동	6.7	7.0	0.3	4.2
일반군사 활동 소계	554.1	573.8	19.6	3.5
해외 군사작전 비용				
승인 규모(현재)	130.0	-		
2010 추정	33.0	-		
2011 예산	-	159.3		
해외 군사작전 비용 소계	163.0	159.3	-3.7	-2.3
재량지출 총계	717.1	733.1	16.0	2.2
법정지출	5.0	5.6	0.6	12.3
총국방예산(해외 군사작전 비용 제외)	559.1	579.4	20.3	3.6
총국방예산(해외 군사작전 비용 포함)	722.1	738.7	16.6	2.3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표 1-7> 분야별 지출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09 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량지출 프로그램												
안보	782	855	895	827	811	825	845	882	885	907	931	955
비안보	437	553	520	475	456	457	465	475	486	497	511	529
재량지출 프로그램 합계	1,219	1,408	1,415	1,301	1,267	1,283	1,310	1,337	1,371	1,405	1,442	1,484
법정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678	715	730	762	801	845	888	945	1,002	1,064	1,130	1,201
메디케어	425	451	491	501	556	623	662	724	757	791	881	953
메디케이드	251	275	297	274	292	313	336	362	389	419	451	487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151	-73	11	10	7	6	3	1	*	*	-	-
일자리 창출 대책	-	12	25	8	3	2	-	-	-	-	-	-
의료보험 개혁	-	6	-7	-17	2	30	72	101	100	100	104	106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607	737	619	570	547	546	544	563	567	568	616	637
법정지출 프로그램 합계	2,112	2,123	2,165	2,107	2,208	2,364	2,500	2,606	2,815	2,942	3,182	3,384
순이자(Net interest)	187	188	251	343	436	510	571	627	681	733	786	840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 ¹⁾	-	1	3	4	4	4	5	5	5	5	5	5
총재정지출	3,518	3,721	3,834	3,755	3,915	4,161	4,386	4,665	4,872	5,084	5,415	5,713
GDP 대비 %	247	254	251	232	228	229	229	231	231	230	235	237

주: * 5억달러 이하

1) 이 금액은 연방정부의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에 대한 잠정 배정액. 이와 같은 지원은 재량지출이나 법정지출, 세금감면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편의상 지출에 포함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표 1-8>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재원

(단위: 십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승인규모	예산요청				
기관별 재량지출 재원:						
안보 기관:						
Defense(DOD)	530.8	548.9	566.4	581.8	597.8	616.0
Energy -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9.9	11.2	11.6	11.9	12.4	12.9
Homeland Security(DHS)	39.4	43.6	44.2	44.8	45.3	46.7
Veterans Affairs	53.1	57.0	59.7	61.3	63.0	64.7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50.6	58.5	65.7	69.0	71.2	73.6
안보 기관 합계	683.7	719.2	747.5	768.7	789.7	814.0
비안보 기관:						
Agriculture	25.0	23.9	24.6	24.5	25.2	26.0
Commerce	13.9	8.9	9.1	8.8	8.5	8.8
Education	46.8	49.7	50.1	50.2	51.4	52.7
Energy(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제외)	16.5	17.1	17.1	17.2	17.7	18.3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84.1	83.5	82.4	80.7	83.1	85.5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43.6	41.6	41.3	42.0	44.1	45.3
Interior	12.2	12.0	11.9	11.8	12.2	12.5
Justice	27.5	24.1	28.5	28.0	29.0	29.9
Labor	14.3	14.0	13.5	13.1	13.3	13.5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0.1	0.1	0.1	0.1	0.1	0.1
Transportation	76.0	77.6	79.2	80.6	82.1	84.7
Treasury	13.6	13.9	14.1	14.5	15.1	15.9
Corps of Engineers	5.4	4.9	4.7	4.6	4.7	4.8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0.3	10.0	9.4	8.8	8.6	8.5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6	0.7	0.6	0.6	0.6	0.7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18.7	19.0	19.4	20.0	20.6	21.0
National Science Foundation	6.9	7.4	7.8	8.3	8.9	9.5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8	1.0	1.0	0.9	0.9	1.0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9.3	10.1	10.5	10.9	11.4	11.7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1.2	1.4	1.7	2.0	2.3	2.6
Other Agencies	19.4	20.2	19.2	18.6	19.1	19.5
비안보 재량지출 예산권한 합계	392.1	386.4	437.1	399.4	416.0	428.7
비안보 재량지출 예산재원 합계	446.3	441.3	446.4	446.2	459.1	472.3

<표 1-8>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재원(계속)

(단위: 십억달러)

	2010	2011				
	승인규모	예산요청	2012	2013	2014	2015
기타 재량지출 재원:						
해외 군사작전 비용:	130.0	159.3	50.0	50.0	50.0	50.0
Defense	129.6	159.1	50.0	50.0	50.0	50.0
Homeland Security	0.2	0.3	-	-	-	-
Justice	0.1	-	-	-	-	-
기타 추경 승인액/ 긴급자금	0.4	-	-	-	-	-
Agriculture	0.4	-	-	-	-	-
Other Agencies	*	-	-	-	-	-
FY2010 추경 요청액	41.1	-	-	-	-	-
Defense(해외 군사작전 비용 포함)	33.0	-	-	-	-	-
Homeland Security	3.6	-	-	-	-	-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4.5	-	-	-	-	-
재량지출 예산권한 총합	1247.3	1265.0	1234.6	1218.1	1255.7	1292.6
재량지출 예산재원 총합	1301.5	1319.8	1243.9	1264.9	1298.8	1336.2

주: * 5천만달러 이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4. 주요 재정정책

FY2011 예산안은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재정건전화에 국정능력을 집중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가. 고용촉진·지원 및 경기회복 정책

□ '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ARRA)의 관련 정책 연장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제시

○ 감세, 신용 가용성 확대, 인프라 투자, 실업자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방안을 활용

□ (경기부양법 일부 조항 연장) '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

○ 실직가구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실업급여 확대(490억달러 지원⁴⁾)

○ COBRA 의료보험* 대상자의 보험료 보조 정책 연장(87억달러)

○ 중소기업 사업자 및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연계 세액공제(Making Work Pay Credit) 2011년까지 연장(612억달러)

○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 상향조정 및 보너스 감가상각 적용기한 1년 연장(FY2010~FY2011년: 388억달러)

○ 선진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산투자에 대해 2011 과세연도까지 30%의 세액공제 제공

* 선진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세액공제 대상: 태양·풍력·지열 에너지 생산,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의 생산을 위한 제조설비 설치·확장

4) 이후 제시된 소요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FY2011 예산안의 정책 제안으로 인한 FY2010~FY2020까지의 재정상의 총비용

<참고 5>

COBRA 의료보험 및 경기부양법(ARRA)하의 COBRA 보험료 보조 정책

실직 등으로 의료보험을 잃은 자, 배우자, 부양자녀 등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1985년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법 제정.

경기부양법(ARRA)에서는 COBRA 의료보험 대상자에게 의료보험료를 65% 인하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 자격조건은 '08.9월부터 '10.2월까지 비자발적인 고용의 종료로 인해 의료보험을 상실하여야 하며 보험료 인하는 '09.2.17일 이후 최대 15개월까지 적용

□ (일자리 창출 대책 법안)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인 일자리 창출 대책*에 1천억달러 배정

* '09.12월 하원에서는 일자리 창출 법안(Jobs for Main Street Act of 2010)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

○ FY2011 예산안에서는 지출과 수입에 각각 500억달러씩 총 1천억달러를 잠정배정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규모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확정 가능

□ (신규 대책) 일자리 창출 대책에 배정한 1천억달러 이외에 FY2011 예산안에서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시

○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기 위해 '09.2.17일 이후 발행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5년 이상의 장기 보유 주식 매도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면제(81억달러)

* 현행법: 자본이득세의 50% 공제, 경기부양법(ARRA): 75% 공제

○ 연구 및 실험 세액공제(R&E credit) 영구화(857억달러)

○ 중소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SBA) 7(a) 대출 보증 프로그램에 175억달러 요청

○ 무역증진을 위해 상무부의 국제무역행정국의 예산을 20% 증액하고 기타 수출관련

기관의 예산을 증액 배정

- 지역 및 국가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기금(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and Finance Fund)을 신설하여 FY2011에 40억달러 배정(5년간 250억달러)

나. 재정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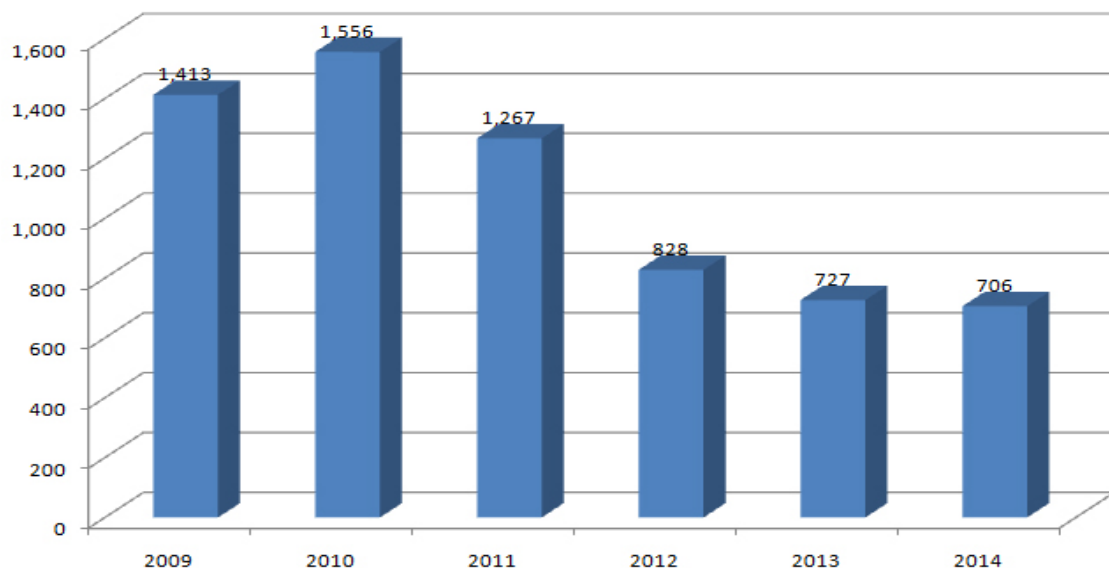
□ 경기부양책 등으로 악화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제시

- 재정위원회 설립,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재정사업 운영 개선방안 등과 함께 PAYGO 원칙 도입 및 신속재원폐지 등 예산제도 개혁을 제안

□ (적자 감축)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정적자를 임기 내에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FY2010 예산안에 이어 재약속

[그림 1-3] FY2011 예산안 재정적자 전망

(단위: 십억달러)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 (재정위원회 설립*)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재정위원회 설립
 - (중기적 과제) FY2015까지 기초재정수지 균형(이자지급을 제외한 재정수지)을 달성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
 - (장기적 과제) 복지부문 법정지출(entitlement spending)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검토

<참고 6> 재정위원회 설립

- '10.1월 상원에서는 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안을 부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대통령령을 발동하여 재정위원회를 설립할 것임을 언급
- '10.2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초당적 성격의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 구성) 재정위원회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오바마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얼스킨 볼스(민주당)**와 **앨런 심슨(공화당)** 전 상원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 대통령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6명을 임명하고,
 - 나머지 12명은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선출
 - 상원 민주/공화 각각 3명, 하원 민주/공화 각각 3명
 - (보고서) 위원회는 FY2015까지 기초재정수지 균형 달성 방안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2월 1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
 - 재정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총 18명의 위원 중 14명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

□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3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향후 10년간 2,5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

* 안보기관에 속하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보훈처, 에너지부의 국가핵안보국, 기타 관련 국제협력 계정을 제외한 재량지출

- 다만, 동 제안은 정부기관의 모든 회계계정을 일률적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 중요도가 높은 정책과제는 증액될 수 있는 반면, 중요도가 낮은 재정사업은 삭감하여 총계 수준에서 비안보 재량지출 분야를 동결한다는 의미

<표 1-9> 기관별 재량지출

(단위: 예산재원, 십억달러)

	2010	2011				
	승인규모	요청	2012	2013	2014	2015
안보기관	683.7	719.2	747.5	768.7	789.7	814.0
비안보기관	446.3	441.3	446.4	446.2	459.1	472.3

주: 1. 해외 군사작전 비용, 긴급자금 제외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 (재정사업 운영 개선) 국가 재원의 부당수취를 방지하고 세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해 FY2010 예산안에 이어 이번 예산안에서도 다음 4개 분야에 증액 지원

- 사회보장국(SSA)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Continuing Disability Reviews(지속적인 신체장애상태 재심사)와 SSI(생활보조금)의 재판정에 지원
- 의료보험 부정수령 및 남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실업급여 부정수령 축소
- 국세청(IRS)을 통한 세법집행 강화

→ OMB는 상기 4개 분야를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320억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 (PAYGO 원칙 적용) '10.2월 대통령 서명을 마치고 효력 발생

- PAYGO 원칙은 신규 법정지출이나 세입감소 정책에 대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출감소 혹은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 동 원칙에 위배되었을 시에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PAYGO원칙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법정지출 프로그램에 일률적인 삭감 조치 시행

□ (신속재원폐지 규정 제안)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신속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를 제의

* 2. 예산기조 편에 서술된 <참고 3> 참조

- 대통령에게 의회가 승인한 재원에 대해 개별 조항을 선택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예산안에 제시된 제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원폐지 요구의 항목 수를 제한하여 의회에 송달할 수 있으며,
 - 의회는 재원폐지 제안에 대한 신속한 가부투표(up-or-down vote) 필요
- 재원폐지 제안은 재원의 축소나 폐지만 가능하며, 이로 인한 재원 절감분에 대해 대통령은 재원의 사용처를 변경할 수 없음
- 하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행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표결하며,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도 정해진 기일 내에 수정없이 원안에 대해 표결